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1/ 12/ 1 통권 1547호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와 대책 |

2021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

아파트 등 주택가격 폭등과 장수부모 1세대 1주택의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계산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매출에누리 · 매출할인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세무상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된다
-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은 12.1.~12.15.입니다
- 올해 11월 11일 소득부터 대리기사, 킥서비스기사, 캐디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시작됩니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공동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전 각각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차감공제되지 아니함 (p.11)

CEO·CFO·COO · 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 상식과 신고납부 단계별 주의점 10가지〉

개념, 구분	구체적 내용, 계산방법, 쟁점
① 합산범위	이번 증여건부터 만 10년 이내 기존 증여재산 모두 합산
② 비과세증여	자녀(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혼수용품, 부의금, 장학금 등
③ 신고납부기한	최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④ 10년 단위 증여공제	성인(20살 이상)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 배우자 6억, 기타친족 1천만원(부모, 조부모 증여 모두 합해서 5천만원 한번만 공제)
⑤ 합산 · 누진세율	10년간 총 증여재산 합산 - 5천만원 = 과세가액 × 누진세율(1억까지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
⑥ 기납부 세액공제	산출세액 - 10년내 기존 증여 때마다 계산되었던 산출세액(세액공제 전 금액) 차감
⑦ 자진신고 세액공제	결정세액 × 3%의 자진신고세액 공제
⑧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 - 10년내 증여재산 기납부세액 - 3% 세액공제
⑨ 2개월 분납	납부할 세금이 2천만원 넘으면 50%를 신고기한에 내고, 나머지 50%를 추가 2달 내 납부(이자 등 없음)
⑩ 연부연납	납부할 세금을 5년간 연부연납 가능(연납기간이자 납부+납세담보제공)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47호 / 주간 48호

2021. 12. 1.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 상식과 신고납부 단계별 주의점 10가지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아파트 등 주택가격 폭등과 장수부모 1세대 1주택의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계산	2
C E O 에 세 이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와 대책 I	4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업무용승용차 관련 문의 - 법인 토지·건물 일괄 매매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해외매출처에서 일부 지원받은 수출비용(포워딩,통관)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 문의 - 퇴직소득 관련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매출에누리 · 매출할인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세무상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된다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어머니의 상속포기 vs 어머니+자녀 공동상속 경우 상속세 비교 - 근로소득세 세금공제 저축	10 11
직 장 인 Survival	평생 학습이 도움이 되는 7가지 방법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전자세원-749, 2021.02.18) - 갑, 을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자 등록함에 있어, 갑, 을 법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전법령부가-224, 2021.03.08)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내년 6월까지 연장	15
마케팅 Tax consulting		13
세 무 정 보	-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은 12.1~12.15입니다 - 올해 11월 11일 소득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시작됩니다	16 33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5

아파트 등 주택가격 폭등과 장수부모 1세대 1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계산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 경우 : 조정지역(서울 등) 아파트 : 10년 전 취득가 5억원, 현재시가 20억원(전세 보증금 10억원 있음)

증여, 부담부증여 구분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계산방법(자녀 중 1명에게만 명의 이전)
1. 부담부증여부분 (양도소득과세) 전세금은 자녀가 상환 해야 함	<p>10억원 전세금은 양도대가임</p> <p>① 9억 전세금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p> <p>② 10억-9억 = 9억원 초과하는 1억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됨</p> <p>③ 양도차익 = (양도가액 1억원 - 취득원가 2500만원(25%) = 7500만원임</p> <p>④ 장기보유공제 적용됨(1세대1주택이면 10년이므로 7500만원×80%인 6000만원 공제됨)</p> <p>⑤ 양도소득 = 1억-2500만원-장기보유공제 6000만원-기본공제 250만원=12,500,000원</p> <p>⑥ 양도소득세 계산 = 12,000,000원까지 6%+500,000원×15%=795,000×1.1 = <u>874.500원</u></p>
2. 순수증여부분 (증여세 과세)	<p>시가 20억원-전세금 10억원=10억원 증여(5천만원 공제는 과거 이미 적용으로 가정)</p> <p>① 1인 증여세 = 1억원×10%+초과 4억원×20%+초과 5억원×30% = <u>2.4억원</u>(+상기 1의 ⑥ 874,500원)</p>

2. 순수증여부분 (증여세 과세)	② 자녀 2인에게 증여시 : 증여가액은 각 5억원(1인당 증여세는 $1\text{억} \times 10\% + 4\text{억} \times 20\% = 9\text{천만원}$) 총 증여세는 $9\text{천만원} \times 2\text{인} = \underline{1.8\text{억원}}$
3. 부담부증여 아닌 전 액증여	① 1인증여 : $1\text{억} \times 10\% + 4\text{억} \times 20\% + 5\text{억} \times 30\% + 10\text{억} \times 40\% = \underline{6.4\text{억원}}$ ② 2인증여 : $20\text{억} \div 2\text{인} = 10\text{억}$ ($1\text{억} \times 10\% + 4\text{억} \times 20\% + 5\text{억} \times 30\% = \underline{2.4\text{억원}}$) 2인 총 증여세 = $2.4\text{억원} \times 2\text{인} = \underline{4.8\text{억원}}$
4. 상속인 경우 (부동산 단일재산)	① $20\text{억} - \text{배우자공제 최소 } 5\text{억} - \text{자녀 일괄공제 } 5\text{억} = \text{상속세 과세가액 } 10\text{억원임}$ ② 상속세 = $1\text{억} \times 10\% + 4\text{억} \times 20\% + 5\text{억} \times 30\% = 2.4\text{억원}$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와 대책 I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받다가 작년부터는 코로나19로 심한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금년 봄 3월26일에 국세청은 696만명의 자영업자들을 모두 올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0월27일 전국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불나방’말에 논란도 일었다. 이처럼 자영업자에 대한 걱정이 이래저래 많다. 게다가 한국자영업연구원 권순우원장의 지적대로 ‘최저임금인상→기업수익악화→고용축소→가계소득감소→수요감소’라는 악순환의 위험을 고려하여 균형감있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야했다. 그런데 ‘무능·편벽’한 문재인정부는 집값폭등, 줄속탈원전정책등과 함께 경제를 뭉개다가 팬데믹에 따른 본격적인 고통이 격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0년 OECD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미국6.3%, 일본10.0%, 한국24.6%다.

따라서 미국·일본 수준으로 줄이는 비전이 세워져야한다. 자영업자가 어려움이 큰데도 많은 이유는 산업공동화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제조업 공장이 해외로 빠져 나갔다. 2011~2020년 누적치로는 49만1000개에 달한다. 지난 10년 한국 10대 재벌들의 매출은 두배 이상 늘었는데 종업원수는 거의 그대로다.

금융감독원자료에 따른 10대 기업 중 1위, 삼성전자의 2011년도 매출액은 120조8,157억원에 종업원수는 101,970명이었는데 2020년 매출액은 236조8,069억원에 종업원수는 111,274명(2021년 6월말 기준)이었다. 매출은 1.96배 성장했으나 종업원은 거의 그대로다. 5위, 현대차도 42조7,740억원, 57,105명이 103조9,976억원, 70,641명으로 매출은 2.45배 성장했으나 종업원은 23% 늘었을 뿐이다.

더구나 현대차는 1996년 이후 25년간 국내공장 증설이 하나도 없었다.

9위, LG전자도 그렇다. 28조0,971억원, 35,286명이 63조2,620억원으로 늘었으나

39,099명밖에 되지 않아 2.25배 성장에 종업원은 거의 그대로다. 10위, 기아차도 마찬가지다.

정부로부터 극진히 혜택을 받는 한국의 10대 대표기업들이 성장하면서도 모두 해외에 나갔고 국내 일자리 기여가 거의 없었다. 중견·중소기업들도 모두 따라했다. 바로 공장해 외탈출 오프쇼어링(OFFSHORING)이다.

오프쇼어링만 문제가 아니다. 괴상한 기업문화가 있다. ‘직급정년제’라 할수 있다. 신입 사원 20명이 입사했다. 그 후 4~5년이 지나 12명이 과장이 되면 진급되지못한 8명은 퇴직 후 여기저기 전전하다 자영업자가 된다. 유럽에 가보면 한국과 달리 나이지긋한 과장을 왕 왕 본다. 물론 30대 새파란 부사장도 만난다. 과장후 5~6년 지내면서 7명이 부장이 되면 5명은 퇴직한다. 그후 3명이 이사가 되면 4명은 퇴직후 자연스레 자영업자가 되어 끝내는 골탕을 먹는다. 이래서 자영업자가 끊임없이 생겼던 이유다. 자영업자중 6~70%는 고배를 든다.

대책은 무엇인가?

리쇼어링(RESHORING)이다. 기업의 U턴이다. 미국의 바이든대통령은 보라. 자국기업의 리쇼어링만이 아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등 타국의 기업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라 한다.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과 경제안보 때문이다. 강력한 리쇼어링을 실천하고 직급정년제란 괴상한 기업문화를 바꾸는 대선후보들의 정책대결이 요구된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19일 (금)	11월 22일 (월)	11월 23일 (화)	11월 24일 (수)	11월 25일 (목)
미	달	러 (USD)	1180.50	1183.50	1187.40	1188.90	1188.50
일	본	엔 (JPY)	1033.31	1037.57	1033.92	1032.79	1029.54
캐	나	다 달 러 (CAD)	936.83	935.72	934.85	937.99	938.56
홍	콩	달 러 (HKD)	151.57	151.91	152.43	152.55	152.40
위	안	화 (CNH)	185.07	185.33	185.94	186.13	186.07
유	로	화 (EUR)	1342.52	1335.28	1334.52	1337.22	1331.30
호	주	달 러 (AUD)	859.46	856.26	857.96	859.16	855.42
싱	가	폴 달 러 (SGD)	870.13	868.78	869.95	870.57	868.50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2.31	282.90	283.69	283.14	282.27

업무용승용차 관련 문의

- Q** 업무용승용차 비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서 장기렌트로 중형 승용차와 금융리스로 대형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장기렌트(3년)중인 중형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임차료의 70%가 아닌지요?
 2. 금융리스(5년)중인 대형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 역시 임차료의 70%가 아닌지요?
- A**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에서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감가상각비가 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임차한 경우 임차료의 70%가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해외매출처에서 일부 지원받은 수출비용(포워딩,통관)은 부가세 과세대상아님

- Q** 당사에서 해외매출처로 제품 선적을 하고 수출비용(포워딩,통관) 일부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회계처리는 비용 마이너스 처리할 계획인데
지원받은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A** 해외 매출처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일종의 사례금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토지.건물 일괄 매매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Q** 법인 대 법인 간 토지.건물 일괄 매매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향후 세무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각 법인이 서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총 매매 금액은 확정하였으나 토지. 건물 각 안분 금액 확정은 어느 법인 기준으로 안분을 하여야 하는지요?

A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자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 건물 일괄매각시 실제 매각거래 금액을 공시지가(토지, 건물)나 감정평가기준금액(토지, 건물)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 관련

Q

1. 단체협약에 의해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예규가 있던데요(소득, 소득세과-157, 2011.02.18)

혹시 사학연금 가입자라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이 없고 사학연금측에서 수령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유족위로금을 퇴직소득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원래대로면 회사에서 퇴직소득 발생대상자가 아닌데 사학연금과 회사 각각에서 퇴직소득이 발생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2. 퇴직소득 처리가 가능하다면, 사학연금 홈페이지에 "나중에 지급하는 기관에서 먼저 지급한 기관의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던데 연금을 선수령하고 유족위로금을 후에 받는다면 회사에서 유족위로금은 100이지만 연금수령액 200까지 합산한 퇴직소득 300에 대해서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하는 건가요?

A

1. 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유족이 받는 위로금성역의 보상금은 귀사의 의견대로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퇴직소득은 소득자 기준으로 회사와 사학연금측에서 수령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연금이 우선 지급되고 유족위로금이 나중에 지급되는 경우 유족위로금 지급하는 곳에서 연금지급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유족위로금을 합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반영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출에누리 · 매출할인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세무상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기업은 매출증대와 발생한 매출의 조기 대금회수 등을 위해 여러 가지 거래방법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매출에누리의 회계 및 세무처리방법

매출에누리는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시점부터 매출가액의 일부를 감액해주거나 판매물품의 수량부족이나 품질의 불량 파손 등의 이유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일반기업에게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6.5에서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매출에누리는 비용의 발생이 아닌 매출의 조정항목의 성격을 가지게 되며, 회계상으로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실무상으로는 매출에누리가 발생되면 해당 금액을 매출에누리 계정으로 반영한 후 기말결산시에는 매출에누리 계정 총액을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순매출액만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면 된다. 즉, 기말 결산시 매출에누리계정의 차변잔액을 매출계정의 차변에 대체하게 된다.

기업회계상 매출에누리를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법에서도 매출에누리는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소득세법에는 매출에누리를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공급가액에 매출에누리를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에 발생한 에누리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의 감액을 수반시키게 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① 거래시점부터 감액해주는 경우

(개당 100원짜리 제품을 12개 판매하면서 10개 대금만 받기로 한 경우)

차) 매출채권	1,100	대) 매출	1,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
② 제품판매후 불량발생하여 감액하기로 한 경우			
▶ 제품판매시			
차) 매출채권	1,100	대) 매출	1,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
▶ 제품불량에 따라 매출에누리 인식			
차) 매출에누리	200	대) 매출채권	220
부가가치세예수금	20		
▶ 결산시			
차) 매출	200	대) 매출에누리	200

매출할인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방법

매출할인이란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상으로 매출할인도 매출에누리와 같이 상품, 제품의 총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의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 § 11)’고 하였으므로 매출할인액은 이자비용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도 매출할인을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매출에누리와 똑같이 처리하면 된다.

▶ 판매시점			
차) 매출채권	1,100	대) 매출	1,000
		부가세예수금	100
▶ 회수시점(조기수금에 따라 할인)			
차) 현금	1,045	대) 매출채권	1,100
매출할인	50		
부가세예수금	5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어머니의 상속포기 vs 어머니+자녀 공동상속 경우 상속세 비교

구분	어머니의 상속포기시	어머니+자녀 공동상속시	어머니+자녀 공동상속 후 어머니 유고시
상속재산가액	40억	40억	10억6,000만
(-)부채	(-)5억	(-)5억	-
상속세과세가액	35억	35억	10억6,000만
(-)일괄공제	(-)5억	(-)5억	(-)5억
(-)배우자공제	(-)5억	(-)15억	-
상속과세표준액	25억	15억	6억6,000만
상속세산출세액	8억4,000만	4억4,000만	1억800만

※세율(과세표준 5억~10억) : 9,000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30%

※세율(과세표준 10억~30억) : 2억4000만원+10억원 초과 금액의 40%



연금계좌 세제혜택 금액 현황과 개정안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미만	50세 이상	개정안	소득공제율
4000만원 이하 (5500만원)	연금계좌 400만 원	연금계좌 660만원	연금계좌 600만원	15%
1억원 이하 (1억2000만원)	(퇴직연금 합산 700만원)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12%
1억원 초과 (1억2000만원)	연금계좌 300만원(퇴직연금 합산 700만원)			



■ 근로소득세 세금공제 저축

저축명	공제금액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대상연금계좌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 총 1000만원 -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이 없는 경우 연금 저축계좌는 400만원(50세 이상은 600만원). 단 총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총급여액이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12%)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저축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무주택 세대주 등)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액의 40%(연간 24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종합합산소득이 없는 자)



■ 비과세 저축

저축명	가입대상	불입요건	적용기한
비과세 종합저축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가족 또는 유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1인당 5000만원 이하	2022.12.31. 이전 가입분 이자 · 배당소득
조합 등 예탁금	만19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농민 · 어민, 농협 등의 조합원 · 회원	3000만원 이하	2022.12.31.까지 발생된 이자소득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농민(2ha 이하 경작), 어민(20t이하 어선 소유)	연간 240만원 이하, 3~5년 저축계약	2022.12.31.이전 가입분 이자소득
재형저축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자)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사업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분기별 300만원 이내 계약기간 7년(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2015.12.31. 이전 가입분 이자 · 배당소득



평생 학습이 도움이 되는 7가지 방법

1. 관련성 유지

뒤쳐지지 마세요.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 세트를 조정하여 업계와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려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2.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라

평생 학습은 직장을 잃거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것과 같은 예상치 못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 배우면 안락한 곳에서 더 쉽게 벗어나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프로필 업데이트

항상 배우면 경력이 계속 향상되고 성장하며 동료와 관리자로부터 추천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생 동안 여러 번 직업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4. 능력은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도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벤처를 탐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5.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킨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6. 관점을 바꿔라

지속적인 학습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마음을 열고 태도를 바꿉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같은 상황의 더 많은 면을 더 잘 볼 수 있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평생 학습

평생 학습은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다른 개인이 추가 교육을 추구하도록 격려하여 평생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신 판례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공동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전 각각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차감공제되지 아니함

갑, 을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자 등록함에 있어, 갑, 을 법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전법령부가-224, 2021.03.08

질 의

- 갑, 을 법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부동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갑, 을 법인이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공동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갑, 을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자 등록함에 있어, 갑, 을 법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갑, 을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전자세원-749, 2021.02.18

질 의

- 수익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서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기준법령법인-172, 2021.02.03

질 의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지출액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

정부 법인세제과-54, 2021.1.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2021.1.2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법령법인-1380, 2021.03.02

■ 질 의

- 법인(금융회사등은 제외)이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2.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2.24.

금융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이하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4항(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서면법령법인-1782, 2021.03.05

■ 질 의

- A법인은 OO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7.6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한 후
– 2018년 최초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 2018년보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이 증가하였음

질의내용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최초 발생시점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제3호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내년 6월까지 연장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내년 6개월까지로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8년 7월~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3.5%로 인하했었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대폭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었다.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줄이기는 했지만, 인하 자체는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과세대상 80만명에 '초강력' 종부세 고지서 발송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했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보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천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천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어나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주택분 종부세 산출 방식을 예로 들면,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보유 및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착한 임대인 공제' 올 6월 말 계약분까지 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시행 후 기습 몰클한 사연이 잇따르고 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과감하게 임대료를 포기한 것이다. 다함께 코로나 19를 극복해나가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도 제도 확대에 나섰다.

국세청은 25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을 2020년 1월 31일 이전 계약분에서 2021년 6월 30일 이전 계약분으로 확대했다.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된다.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 세액공제 계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은 12.1.~12.15.입니다

— 국세청, 2021. 11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올해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94.7만 명·5조 6,789억 원, 토지분 8만 명(주택분과 중복인원 2.5만 명 제외)·2조 8,892억 원입니다.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분석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1.1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2. 6. 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 홈택스와 홈택스 앱(이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가능
-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납부대상자 및 납부고지서 발송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94.7만 명(세액 5조 6,789억 원), 토지분 8만 명(세액 2조 8,892억 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수)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

였습니다.

-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부기간 (12.1.~12.15.)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하여 내년 말에 확정되며,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2. 분납 신청 및 납부 기간

-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에 따라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 됩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1. 12. 15.)으로부터 6개월('22. 6. 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분납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21.12.15.까지 납부할 금액	'22.6.15.까지 납부할 금액 (분납신청한 금액)
400만 원	250만 원	15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 분납신청한 금액	300만 원 이하 금액

-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2. 6. 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 되었으며,
 - * ('18년까지) 500만 원 초과한 경우 2개월간 분납 가능
('19년부터) 250만 원 초과한 경우 6개월간 분납 가능
- 관할 세무서(우편, FAX, 방문) 혹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구분	분납 신청방법
홈택스	메인화면 '자주찾는 메뉴'의 종합소득세 분납신청
손택스	신청/제출 → 재산세제 세무서류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12. 15.)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 · 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¹⁾하실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²⁾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공동인증 필요)
 - 2)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3. 자진신고 및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12. 1.~12. 15.)동안 자진신고 ·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하였으며,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공동인증 필요)하고 있습니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미리채움 이용 시 공동인증 필요)

-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 → 주요서식

-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또는 분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종합부동산세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구분	항 목	상담 창구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전자신고) 상담	국번 없이 ☎ 126 (1번 선택 후 3번)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 없이 ☎ 126 (2번 선택 후 1번)

· 관할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담당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Ⅲ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 '21년 종합부동산세 관련 주요 개정내용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금액 상향

- 연령별 공제율 인상 및 보유기간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연령별 공제			보유기간 공제(종전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종 전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70% → 8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9억 원→11억 원으로 상향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 허용

- (신청 기간) 매년 9.16.~9.30.*

*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

- (특례 적용 시)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같은 경우 선택), 공제금액 11억 원, 납세의무자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 (미적용 시)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 원씩, 세액공제 불가능

구 분	특례 적용('21.6.1.기준 판단)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1억 원	각각 6억 원씩
세액공제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불가능

*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 전	개 정		종 전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 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 원	0.7%	0.8		0.9%	1.6	
6~12억 원	1.0%	1.2		1.3%	2.2	
12~50억 원	1.4%	1.6		1.8%	3.6	
50~94억 원	2.0%	2.2		2.5%	5.0	
94억 원 초과	2.7%	3.0		3.2%	6.0	

● 세 부담 상한 인상

- 법인 주택분 세 부담 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종 전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2주택	150%	150%	폐 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 적용, 기본공제 및 세 부담 상한 적용 배제
- － (예외)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일반 누진세율*, 6억 원 기본공제 및 세 부담 상한 적용
- * (2주택 이하) 0.6~3.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1.2~6.0%
- 법인 등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임대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불가(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참고 2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개인)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Σ 공시가격	Σ 주택 공시가격	Σ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Σ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	－
공제금액	6억원(1세대1주택자 11억 원)	5억원	80억원
×	×	×	×
공정시장 가액비율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		
=	=	=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	×



세 율(%)	과세 표 준	일반		3주택 등		과세표준	세율 (%)	누진 공제	과세 표 준	세율 (%)	누진 공제
		세율 (%)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3억원 이하	0.6	-	1.2	-	15억원 이하	1.0	-	200억원 이하	0.5	-
	6억원 이하	0.8	60만원	1.6	120만원						
	12억원 이하	1.2	300만원	2.2	480만원	45억원 이하	2.0	1,500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 이하	1.6	780만원	3.6	2,160만원						
	94억원 이하	2.2	3,780만 원	5.0	9,160만원	45억원 초과	3.0	6,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3.0	11,300만 원	6.0	18,560만 원							
=											
종합부동산 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X 세부담상한율]을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300%), 3주택(300%), 그 외(150%)										
=											
납 부 할 세 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참고 3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법인)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Σ 공시가격	Σ 주택 공시가격	Σ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Σ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공제금액	해당없음	5억원	80억원						
X		X							
공정시장 가액비율	95%('21년), 100%('22년 이후)								
=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X		X							
세 율(%)	과세표준	일반 (%)	3주택 등 (%)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
	3억원 이하	3.0	6.0	15억원 이하	1.0	-	200억원 이하	0.5	-
	6억원 이하			45억원 이하	2.0	1,500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12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45억원 초과	3.0	6,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		=		=		=			
종합부동산 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⑤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세액공제(%)	해당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해당없음	150%							
=									
납 부 할 세 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참고 4 -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문답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됨
 - * 재산세 :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과세

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함
- 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 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대상 공시가격임
 - 다만,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계약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되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공시가격이 과세대상 금액임

③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올해는 주택분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6% 단일세율, 기본공제액 6억원 및 세부담상한 미적용 등 주택분 과세가 강화되었음
 - 다만, 공공주택 사업자 등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 매년 신청에 의해 일반세율 적용(한번 신청하면 계속 적용 되는 것이 아님)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총 전	현 행		총 전	현 행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 또한, 조정대상 2주택자의 세부담상한 비율을 종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음
(세부담상한 비율)

구 분	총 전 (개인·법인 동일)	현 행	
		개 인	법 인
일반 1·2주택	150%	150%	폐 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 올해는 1세대1주택자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되었으며, 고령자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인상되었음
- 또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음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총 전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70% → 8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④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합산배제는?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 9.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중부세 과세) 됨
- 다만, '18. 9. 13.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됨



- * '18. 9. 14. 이후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 포함

⑤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⑥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데 주택수 계산 방법은?

-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
-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임
-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수를 계산함
 - * 부부공동 소유 지분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등
-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됨

〈세율적용 주택수 계산 사례〉

구 분	주택보유 현황	주택 수
사례 1	· 서울 주택 2호*, 강원 1호 * 2호 중 1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반 2주택
사례 2	· 서울 주택 1호(부부 공동명의) · 세종 주택 1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사례 3	· 부산 주택 2호 · 강원 주택 1호(부속토지만 소유)	3주택 이상

⑦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함

⑧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 * 1세대1주택자 11억원 공제, 이외 주택자 6억원 공제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함
- 다만, 금년부터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에 의해 1세대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음

⑨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란 무엇인지?

-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적용함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300%), 그 외 150% 적용
- 또한,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일정비율(150%,3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으로 보는 것임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직 전 연 도 총세액상당액×한도비율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액과 <u>세부담상한 적용전 종부세액의 합계액</u> (재산세 + 종부세)	≤	과세유형별로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과 종부세상당세액 합계액의 일정한도액 (재산세+종부세) X 150%, 300%

⑩ 과세대상 주택·토지 명세와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 * 홈택스(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조회 / 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 및 세액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음

⑪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 * 공동소유 상속주택은 세율적용 시 특례이며, 합산하여 과세되고 1세대 1주택자 판정



- 시 주택수에 포함됨
- 다만, 1세대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함

⑫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한 내(9.16.~9.30.)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 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 30.)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 1.~12. 15.)까지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 할 수 있음
 -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함

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된 경우에는?

-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 16.~9. 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 정기 납부기간(12. 1.~12. 15.)까지 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신고해야 함
 - 미신고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됨

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 간 합의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음
 - 지분을 판단은 공부상 면적 기준이 아니며, 주택과 부속토지분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부부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하는 것임

⑮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

☞ (사례) 단독주택 : 주택 지분(남편 100%), 부속토지 지분(아내 100%)

-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서 보유하고있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⑩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 과세기준일 6.1.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중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
 - *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 다만,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공동명의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불가함

⑪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와 법인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신청을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하지 못한 경우 12월 정기신고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고·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 기간에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신청할 수 있음

⑫ 12.15.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됨

⑬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됨
-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⑭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

21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 신고·납부 가능함
 - * 홈택스(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 * 이용 편의를 위해「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정기신고」를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할 예정임.

22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이외의 방법은?

-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납부서를 제공받아 납부하면 됨
 -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 → 주요서식 → 1.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23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동인증서로 접속이 필요한 것은?

-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동인증서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음

홈택스 서비스	공동인증서 필요	
	여	부*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
종합부동산세 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	○	
종합부동산세 신고(미리채움 활용)	○	
종합부동산세 신고(미리채움 미활용)		○

*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 필요

'21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현황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천명, 억원)

구분	합계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0년	77.1	24,539	86.9	15,138	11.0	9,401
'21년	79.6*	28,892	95.8	17,214	12.7	11,678

*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인원 4천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인원 2만 5천명
합계 2만 9천명을 제외한 수치임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현황〉

(명, 억 원)

	2020년		2021년	
	인원	세액	인원	세액
합계	86,950	15,138	95,788	17,214
서울	21,548	7,314	20,675	5,304
인천	3,478	591	3,986	1,053
경기	25,479	2,424	28,445	3,877
강원	2,389	229	2,827	327
대전	1,598	954	1,894	1,206
충북	1,625	120	1,914	181
충남	3,358	308	3,868	410
세종	503	38	696	76
광주	1,880	150	2,307	246
전북	1,824	114	2,126	297
전남	1,618	372	2,036	611
대구	3,159	237	3,687	364
경북	3,381	585	3,909	897
부산	5,778	641	6,503	1,005
울산	2,261	168	2,668	222
경남	4,436	538	5,301	770
제주	2,635	354	2,946	368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현황〉

(명, 억 원)

	2020년		2021년	
	인원	세액	인원	세액
합계	11,011	9,401	12,682	11,678
서울	7,248	6,926	7,293	7,973
인천	240	152	351	276
경기	1,734	920	2,509	1,433
강원	89	117	116	182
대전	103	203	158	264
충북	77	32	123	71
충남	118	54	152	74
세종	12	23	22	26
광주	89	21	152	56
전북	50	45	89	85
전남	61	182	99	230
대구	259	85	366	137
경북	105	167	150	239
부산	523	266	701	328
울산	72	27	92	44
경남	141	115	194	175
제주	90	65	115	85

*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은 최초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오류검증, 납세자 신고 또는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다음 해 말 발표)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지역별 통계는 물건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인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올해 11월 11일 소득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시작됩니다

- 국세청, 2021. 11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올해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육실종사원
 - 매월 제출자료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자 아닌 개인(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말합니다.
 -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는 것이며, 올해 7월 1일 소득지급분부터 매월 제출이 시행되었습니다.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종전 연 단위로 제출하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복지행정 지원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 8~9월 매월 평균 82만 사업자가 매월 656만 명 소득자료 제출
 -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가 시행된 8~9월 동안 월 평균 82만 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성과는 소득자료 성실제출은 복지행정 지원의 주춧돌이라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취지에 사업자와 세무대리인께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 또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도 약 26만 명이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여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 *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 매월 제출하지 않더라도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1년간 가산세 면제됨



□ 소득자료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소득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을 안내하는 알림창을 신설('21년 11월) 하고,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 2.2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21년 10월) 하였습니다.
 - * 건설·음식·소매업 사업자 중 사업소득 신고금액은 있으나 일용근로소득 신고금액은 없는 사업자 등
- 소득자의 업종과 주민등록번호도 정확히 기재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의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되 변경내용은 개별 안내*하고 있습니다.
 - * 주민번호 오류자료 제출 이력자 4.5천 명에게 시스템 변경에 대한 안내문 발송(9·10월)

□ '21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월별 소득자료 최초 제공

- '21년 9월, 실시간으로 수집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제공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하고,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복지행정 지원기관으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자료제공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하여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

대리기사, 킥서비스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인적용역 소득자료도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었습니다.

- '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단축되었습니다.
 - 대리기사, 킥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8개 업종)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 '21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21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직업소개업자,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
- 한편, '21년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2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자료 제출 예시 〉

소득발생시기	제출기한	비고
'21. 1. 1~'21. 11. 10.	'22년 2월 말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
'21. 11. 11~'21. 11. 30.	'21년 12월 말일까지	개정 규정 적용
'21. 12. 1~'21. 12. 31.	'22년 1월 말일까지	
'22. 1. 1~'22. 1. 31.	'22년 2월 말일까지	
'22. 2. 1~'22. 2. 28.	이후 매월 제출	

- 용역제공자가 받는 소득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소득자료는 원천징수 의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하고,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제출의무자가 성실히 제출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있으며, 미제출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용역제공자 인원 수 × 300원 (연간 200만 원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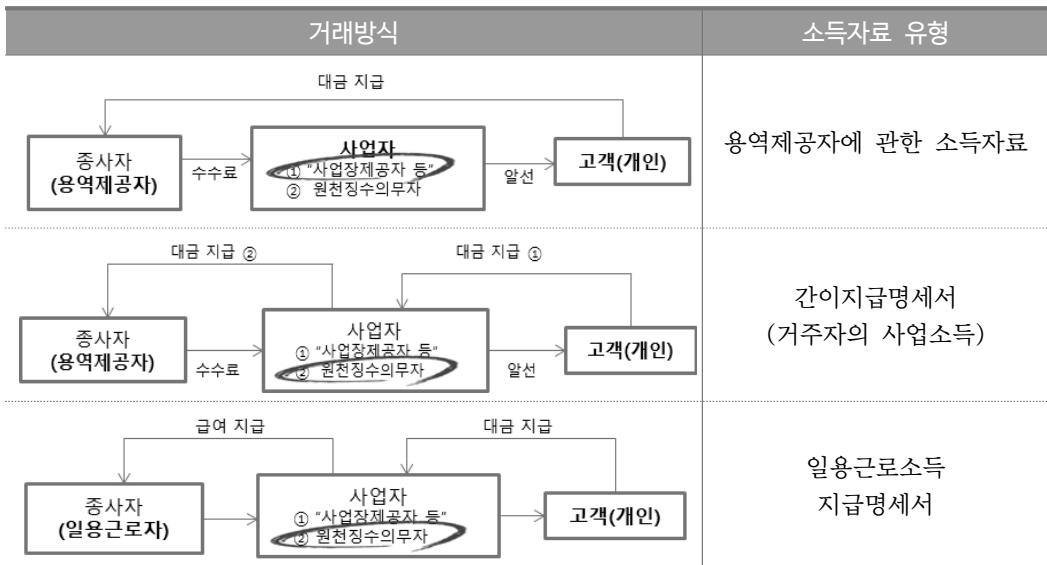
전자제출 방법	
PC	홈택스 → 「복지이음」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모바일	손택스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 반면, '22년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불성실 제출 시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 * ① 미제출 시 소득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20만 원
 - ②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소득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10만 원



③ 신고안내문은 통합하여 한 장으로 발송합니다.

-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 대상이지만,
- 사업자인 인적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대상이고,
 - 용역제공자를 일용근로자 고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입니다.



* (예시) ①사업장제공자가 고객과 용역제공자를 알선·중개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 ②사업장제공자가 사업자인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③사업장제공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따라서, 3가지 제출유형*에 대한 제출방법 등이 포함된 통합안내문을 12월 10일경에 발송할 예정이오니, 해당되는 부분에 관한 소득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④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 시 유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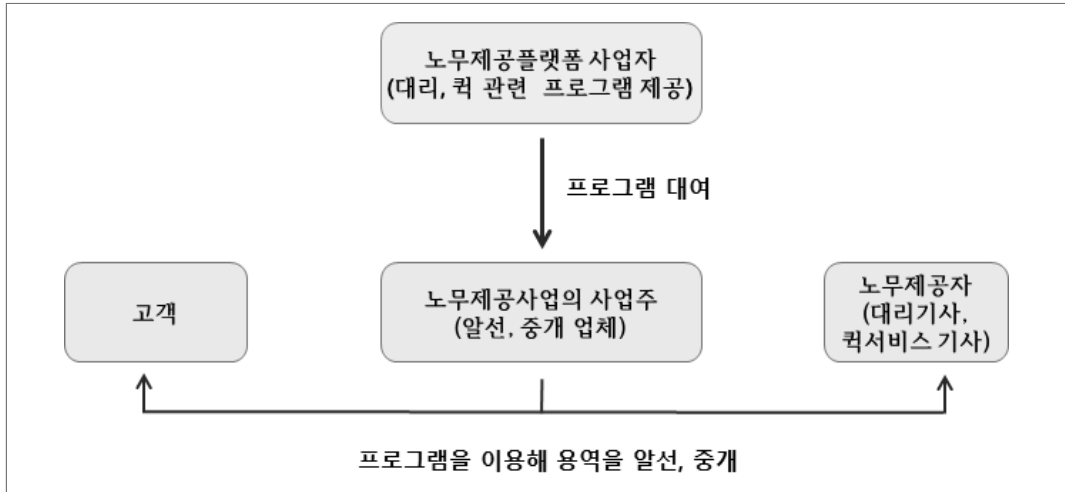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의 경우

- '21년 12월 31일 소득발생분까지는 대리, 퀵서비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는 용역의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가 제출해야 하나,

- '22년 1월 1일 소득발생분부터는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알선·중개업체가 아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기사, 쿼서서비스기사와 대리·쿼 알선중개업체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자

Ⅰ 거래구조 예시 Ⅰ



-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대리, 쿼서비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와 제출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발생시기	제출의무자	제출기한
'21. 1. 1. ~'21. 11. 10.	알선·중개업체	'22년 2월말
'21. 11. 11. ~'21. 11. 30.	알선·중개업체	'21년 12월말
'21. 12. 1. ~'21. 12. 31.	알선·중개업체	'22년 1월말
'22. 1.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그 다음 달 말일

용역대가 기재요령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작성 시 용역제공대가는 용역제공자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월간 총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다만,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일수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Ⅰ 작성사례 Ⅰ

- ◆ (상황) 용역제공자인 대리기사가 12월 한 달 동안 고객으로부터 10일간 20회에 걸쳐 총 200만 원을 받는 경우



◆ 올바른 작성법

2.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 자료내용

일련 번호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용역 구분	용역제공기간			⑬ 용역제공대가
				⑩ 개시일	⑪ 종료일	⑫ 용역제공 일수(횟수)	
1	홍길동	851111-1111111	13	1201	1231	10(20)	2,000,000

① 용역제공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 자료내용

일련 번호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용역 구분	용역제공기간			⑬ 용역제공대가
				⑩ 개시일	⑪ 종료일	⑫ 용역제공 일수(횟수)	
1	홍길동	851111-1111111	13	1201	1231	10(20)	-

② 용역제공대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재사항은 작성

◆ 잘못된 작성법

① 용역제공대가에 사업장제공자 등이 받은 알선수수료를 기재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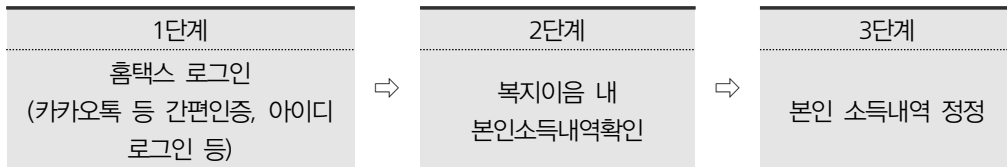
2.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 자료내용

일련 번호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용역 구분	용역제공기간			⑬ 용역제공대가
				⑩ 개시일	⑪ 종료일	⑫ 용역제공 일수(횟수)	
1	홍길동	851111-1111111	13	1201	1231	10(20)	300,000

사업장제공자 등이 받은 알선수수료를 잘못 기재

내년 1월부터는 본인 소득확인 시스템 활용 가능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의무자는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할 뿐 소득 지급자가 아니므로 간혹 용역제공자의 정확한 소득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용역제공자 본인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22년 1월 중).



- 구체적인 본인소득 수정절차, 수정가능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를 통해 상세하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상담·문의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소득자료 제출대상인지, 소득자료 전자제출 방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지방청 소득자료관리TF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

구 분	연락처
소득자료 전자제출 관련 문의	☎ 126 → 1번(홈택스) → 3번(신고·납부) → 2번(지급명세서 등)
실시간 소득과약 제도 취지·내용 등 문의	☎ 126 → 2번(세법) → 3번(원천세)

〈 지방국세청별 소득자료관리TF 〉

구 분	연락처
서울청	☎ 02-2114-3072 ~ 3075
중부청	☎ 031-888-4884 ~ 4886
부산청	☎ 051-750-7492 ~ 7494
인천청	☎ 032-718-6392 ~ 6394
대전청	☎ 042-615-2602 ~ 2603
광주청	☎ 062-236-7456 ~ 7457
대구청	☎ 053-661-7456 ~ 7457

2 실시간 소득과약 제도, 그 동안의 시행 실적

1 매월 82만 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가 시행된 8~9월 동안 월 평균 82만 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는 복지행정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기 위한 소득데이터를 적시에 파악한다는 실시간 소득과약 제도의 취지에 사업자와 세무대리인께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 또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도 소득과약 제도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약 26만 명이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등 실시간 소득과약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매월 제출하지 않더라도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1년간 가산세 면제됨

〈사업자 규모별 소득자료 제출 사업자 수(8~9월 평균)〉

(만 명)

구분	계	일반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인원수	82	56	26

- 다만, 제도 시행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월별 제출실적이 누적되어 시행 이후 1년간의 실적을 분석할 수 있는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적은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도 성실하게 소득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 8~9월 평균 39만 명의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들이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월 평균 5조 원입니다.
 -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한 43만 명(월 평균)의 사업자는 월 평균 10.7조 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 소득자료를 제출한 82만 명의 사업자 중 54만 명(일용근로 29만 명, 인적용역 25만 명)은 일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월 평균 5백만 원 이하로 지급하였습니다.

〈총 지급액 구간별 제출 사업자 수(8~9월 평균)〉

(만 명, 억 원)

구 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사업자	지급액	사업자	지급액
계	39	50,242	43	106,687
1백만 이하	12	680	6	344
5백만 이하	17	4,149	19	5,101
1천만 이하	4	2,860	8	5,506
2천만 이하	2	3,209	5	7,087
2천만 초과	4	39,344	5	88,649

- 60만 명의 사업자는 일용근로자 소득자료를 5건 이하(월 평균)로 제출하였거나, 5건 이하(월 평균)의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건수별 제출 사업자 수(8~9월 평균)〉

(만 명)

구 분	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계	82	39	43
5건 이하	60	28	32
6~10건 이하	12	6	6
11건 이상	10	5	5

- 소득자료를 제출한 개인사업자는 월 평균 50만 명으로 32만 명인 법인사업자 보다 많았습니다.

〈사업자 유형별 제출 사업자 수(8~9월 평균)〉

(만 명)

구 분	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계	82	39	43
개인사업자	50	25	25
법인사업자	32	14	18

- 소득자료 제출 사업자의 약 98%인 80.5만 명(월 평균)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서면 등으로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쉽고 간편한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PC) 홈택스→「복지이음」→ 인건비 간편제출

(모바일) 손택스 → 신청/제출 → 「복지이음」→ 인건비 간편제출

〈제출 방법별 제출 사업자 수(8~9월 평균)〉

(만 명)

구 분	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계	82	39	43
전자(홈택스)	80.5	37.7	42.8
전자 외(서면)	1.5	1.3	0.2



③ 소득자료가 수집된 일용근로자는 307만 명, 인적용역 사업자는 349만 명입니다.

- 8~9월 평균 307만 명에 대한 일용근로자 소득자료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기간 소득자료가 제출된 인적용역 사업자의 수는 월 평균 349만 명입니다.
- 소득자료가 제출된 656만 명(월 평균) 중 30세 미만은 128만 명(20%), 60세 이상은 155만 명(24%)입니다.

〈연령별 소득자 수(8~9월 평균)〉

(만 명)

연령	계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
계	656	307	349
30세 미만	128	61	67
30세 이상	106	28	78
40세 이상	128	41	87
50세 이상	139	63	76
60세 이상	155	114	41

- 외국인 소득자의 수는 34만 명이며, 경기·서울·인천에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 사업자가 많이 거주하였습니다.

〈내·외국인별 소득자 수(8~9월 평균)〉

(만 명)

구 분	계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
계	656	307	349
내국인	622	284	338
외국인	34	23	11

〈주소지별 소득자 수(8~9월 평균)〉

(만 명)

지역	계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	지역	계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
계	656	307	349	광주	18	9	9
서울	128	45	83	전북	23	14	9
인천	42	19	23	전남	22	14	8

올해 11월 11일 소득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시작됩니다

경기	183	75	108	대구	26	13	13
강원	21	14	7	경북	29	17	12
대전	17	8	9	부산	39	20	19
충북	19	11	8	울산	15	8	7
충남	26	15	11	경남	36	19	17
세종	3	1	2	제주	9	5	4

④ 고용보험 적용대상 인적용역 사업자 68만 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인적용역 사업자 중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새로 적용되는 8개 업종*으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가 제출된 인원은 8~9월 평균 68만 명이며, 보험설계사(36만 명), 방문판매원(18만 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과후 강사

〈고용보험 적용 업종별 소득자 수(8~9월 평균)〉

(만 명)

계 (8개 업종)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방과후 강사	대출 모집인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교육교구 방문 강사
67.7	36.0	18.0	4.2	3.0	2.5	1.9	1.7	0.4

3 소득자료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① 소득자료는 빠짐없이 매월 제출해 주세요.

-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하였으나 소득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득자료도 잊지 않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소득자료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 화면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을 안내하는 알림창을 신설('21년 11월)할 예정입니다.

**② 소득유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아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면,
- * 예) 식당주방보조원·건설업종사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고 지급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례
 - 해당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득자의 소득유형을 반드시 확인하고 소득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사업자가 소득유형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 2.2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21년 10월)하였습니다.
 - * 건설·음식·소매업 사업자 중 사업소득 신고금액은 있으나 일용근로소득 신고금액은 없는 사업자 등

③ 소득자의 업종을 정확히 적용해 주세요.

- ☐ 소득자의 소득유형이 사업소득이라면,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업종코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 방문판매원(940908)이나 학습지방문강사(940920)를 기타자영업(940909)으로 분류하는 등 업종코드를 잘못 분류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에, 사업자들이 정확한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입니다.
 - * (안내대상)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업종코드를 기타자영업으로 제출하였으나, 고용보험 대상 업종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 등

④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 ☐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고용보험 업무에 활용되기 어려우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올해 12월 제출분부터는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의 '변환제출방식'*을 통해 제출할 수 없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 *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지급명세서 파일을 홈택스에 업로드·변환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민번호 오류가 있는 간이지급명세서는 같은 방식의 제출이 차단되어 있음
 - '변환제출방식' 화면에 시스템 변경을 알리는 알림창을 게시하고, 주민번호 오류자료 제출이력이 있는 사업자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 '21년 9-10월, 4.5천 명의 사업자세무대리인에게 시스템 변경에 대한 안내문 발송하였으며, 11월 안내문 추가 발송 예정

4 '21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월별 소득자료 최초 제공

- '21년 9월, 실시간으로 수집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보험 확대 업종 관련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478만 건(356만 명 해당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제공하였습니다.
 - 이는 그 동안 제공하지 않았거나(인적용역소득) 분기별(일용근로소득)로 제공하여 고용보험 활용성이 낮았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걸음을 지원하고,
 -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수기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지행정 지원기관으로의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소득자료 적시 제공의 중요성에 발맞추어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소득자료 오류를 매월 정정하고, 제공자료의 오류도 미연에 방지하도록 다단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향후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해당 업종의 소득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는 등 소득자료 연계를 차질없이 집행하여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1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Q&A

1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왜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나요?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 고용보험 제도운영,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2 소득자료 제출기한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종전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였으나, '21. 11. 11. 이후에는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제출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소득세법 § 173).



소득발생시기	제출기한	비고
'21. 1. 1~'21. 11. 10.	'22년 2월 말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
'21. 11. 11~'21. 11. 30.	'21년 12월 말일까지	개정 규정 적용
'21. 12. 1~'21. 12. 31.	'22년 1월 말일까지	
'22. 1. 1~'22. 1. 31.	'22년 2월 말일까지	
'22. 2. 1~'22. 2. 28.	이후 매월 제출	

3 소득자료 제출대상 8개 업종의 용역제공자 유형은?

- ☐ 사업장제공자 등으로부터 사업장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알선 받아 사업 활동을 하며 최종 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자로서
- 대리기사, 소포배달원(퀵서비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을 말합니다.

4 제출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 용역제공자(8개 업종)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173).

* (예시) 대리운전업체, 골프장, 병원·요양원, 욕탕사업자 등

**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횟수, 용역제공대가 등

5

사업장제공자 등이 용역제공자의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횟수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사업장제공자 등이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혜택은 무엇인가요?

- ☐ '21. 11. 11.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 발생분부터 제출기한 내에 홈택스(손택스)를 통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합니다.
 - * 용역제공자 인원수 X 300원 (연간 200만 원 한도)

7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징수될 수 있나요?

- '22. 1. 1.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후 그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명세서 건별 20만 원
→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부를 누락한 경우
 - 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명세서 건별 10만 원
→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하며, 그 누락된 용역제공자의 인원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 소득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제출명세서 건별 10만 원
→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하며, 그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가 총 용역제공자 인원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8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 224②).

9 모든 플랫폼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플랫폼사업자도 8개* 업종 관련 “용역을 알선·중개할 경우” '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대리기사, 소포배달원(퀵서비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육실종사원
 - 다만, '22년 1월 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리·퀵서비스 업종의 경우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가 알선·중개를 하더라도 이들은 제출하지 않고 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용역제공자가 '21년 11월 한 달 동안 30회의 용역을 제공하고, 300만 원의 용역대가를 받은 경우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단, 11월 11일 이후 20일 동안 20회의 용역을 제공하고, 200만 원의 용역대가를 받은 경우로 가정)

- '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매월 제출하여야 하므로 '21년 11월 한 달간의 소득



발생분 전부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 '21년 11월 11부터 11월 30일까지 20회의 용역을 제공하고, 200만 원의 용역대가를 받은 내용은 '2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고,
- '21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회의 용역을 제공하고, 100만 원의 용역대가를 받은 내용은 '21년 1월 1부터 11월 10일까지의 용역제공 자료내용에 포함하여 '22년 2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2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 형태 예시

거래방식	소득자료 유형
<p>대금 지급</p> <p>용역제공자는 고객(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수령하고, 사업자("사업장제공자 등")는 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수령</p>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p>대금 지급 ② 대금 지급 ③</p> <p>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고객(개인)과 인적용역자를 알선·중개하고, 대가 전체를 고객(개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인적용역자에게 지급</p>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p>급여 지급 대금 지급</p> <p>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종사자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하고 대가를 지급</p>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